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26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김 건 · 김기현 · 김기웅

김석기 · 배현진 · 유용원

진종오 · 한지아 · 백종헌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 중복 및 운영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업무는 국가의 책무와 밀접한 범정부적 재외동포정책 영역으로서 재외동포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통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 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1조 삭제).

아울러 기관 통합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되고, 관련 인력의 고용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안 부칙 제3조).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센터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센터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이 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재외동포업무의 흡수·통합에 따른 시험 실시)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재외동포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u> <u>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u> <u>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 · 연수 · 교육 · 문화 · 홍보 사업</u> <u>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 · 전시 사업</u> <u>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u> <u>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u> <u>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u>	<u><삭 제></u>

원을 둔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